

## 해방 이후~1970년대 초반 한국사 개설서의 ‘근대’ 규정 및 시대구분의 변화\*

류 기 현\*\*

### [초 록]

이 글은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출판된 한국사 개설서·통사에서 ‘근대’라는 역사적 시대를 규정·구획하는 양상을 통시적으로 탐구한다.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19세기 중·후반을 기점으로 하고 1945년 해방을 종점으로 잡는 근대라는 시대 규정은 근대 역사학 도입 이래 처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한국사 연구의 전개과정, 한국의 정치적·사회적 변화에 따른 구성물이다.

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의 개설서에는 ‘근대’가 부재했다. 이 시기의 개설서들은 주로 정치론적 관점에서 한국사를 서술했다.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초반에 나온 개설서들은 처음으로 ‘근대’ 및 ‘근대화’라는 개념을 동원해 조선후기-개항기의 역사를 서술했다.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논문에 대하여 유익한 논평과 지적을 해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주제어: 한국사 개설서, 통사, 근대, 시대구분, 근대화론, 내재적발전론  
General Korean History, General History, Modern Age, Periodization,  
Modernization Theory, Internal Development Theory

해방 직후 개설서의 정체론적 서사가 부분적으로 계속되는 가운데 이 시기의 개설서들은 갑오개혁을 비롯한 몇 가지의 역사적 사건들을 한국의 근대 기점으로 제시하면서 발전과 변화라는 시각에서 한국사를 파악하고자 했다.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70년대 초반에 나온 개설서는 조선 후기 개항기에 이르는 시대의 사회경제적 역동성을 강조하고 이 시기의 한국 사회가 자생적 근대화를 이룩할 맹아를 지니고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는 근대화 담론의 전 사회적 확산 및 내재적발전론에 입각한 연구 성과들이 축적된 것을 배경으로 한다. 60년대 중반 이후 개설서들은 한국이 근대 전환기에 단순히 수동적 존재가 아닌 적극적으로 근대에 대응하는 존재였음을 보이고자 했다.

## 1. 서론

역사학에서 시대구분은 역사의 전개과정을 질서 있게 정리하는 작업 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발전 과정과 법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규명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역사를 소유하는 것은 시대구분을 하는 것이다”라는 이탈리아의 학자 베네데토 크로체(Benedetto Croce)의 말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듯이, 시대구분은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론이자 더 나아가서는 역사 연구의 목표 중 하나이다.<sup>1)</sup>

현재 한국사 연구에서는 고대-중세-근세-근대-현대의 5구분법이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분법은 17세기 네덜란드 학자 첼라리우스(Cellarius)가 처음 사용한 고대-중세-근대라는 서양식 시대구분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고조선부터 삼국을 거쳐 신라·발해의 남북국시대까지를 고대로 규정하고, 고려시대를 중세로 규정하며, 조선 건국부터 19세기 말 개항 직전까지의 시기를 근세, 개항기 및 식민지기와 해방 이

1) B. 크로체(1978), 이상신 역, 『역사의 이론과 역사』, 서울: 삼영사, pp. 101-108.

후 시기를 각각 근대와 현대로 규정한다. 이러한 시대구분 방식은 학문적 타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현재 한국사 서술이나 교육 체계에서 보편적으로 쓰인다.<sup>2)</sup>

이런 시대구분에서 ‘근대’를 규정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sup>3)</sup> 역사 시대를 ‘전근대’와 ‘근대’로 양분하여 이해하는 용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시대 구분 개념으로서 근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역사의 ‘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즉 시대 구분 개념으로서 근대는 독일의 개념사가 라인하르트 코젤렉(Reinhart Koselleck)이 말한 바와 같이 단순히 연대기적 추가(period)가 아닌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신기원적 시대(epoch)’라는 역사철학적 의미를 갖는다.<sup>4)</sup> 근대는 여러 시대 구분 단계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현재와 동일한 생활형태, 동일한 시대형을 가진 시대”로서 특히 이데올로기적·정치적 함의를 갖는 것이기도 하다.<sup>5)</sup> 특히 20세기 한국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근대화’(modernization)가 지녔던 담론적 위치를 고려하면, 한국사 서술에서 ‘근대’를 규정하고 시대 구분을 하는 작업이 가진 중요성이 무척 컸을 것임을 알 수 있다.

2) 예를 들어 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각 분류사를 서술하면서 각각의 분야를 고대-중세-근세-근대 태동기-근·현대로 시기 구분했다. 국사편찬위원회·국정도서편찬위원회(2011), 『고등학교 국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참조.

3) 한국에서 사용하는 ‘근대’라는 말은 19세기 이후 ‘modern’의 번역어로 만들어진 말이다. modern은 라틴어의 modernus를 그 어원으로 하는데, 이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서기 5세기의 마지막 10년간으로, 그 의미는 이전 로마제국 시대와 달리 기독교가 국교화한 이후의 시대, 즉 ‘지금의 시대’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미야지마 히로시(2013), 「유교적 근대로서의 동아시아 근세」, 『미야지마 히로시, 나의 한국사 공부: 한국사의 새로운 이해를 찾아서』, 서울: 너머북스, p. 324.

4) 나인호(2011), 『개념사란 무엇인가: 역사와 언어의 새로운 만남』, 서울: 역사비평사, p. 181.

5) 나인호(2011) p. 179.

이 글은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출판된 한국사 개설서·통사에서 ‘근대’라는 역사적 시대를 규정·구획하는 양상을 통시적으로 탐구한다.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19세기 중·후반을 기점으로 하고 1945년 해방을 종점으로 잡는 근대라는 시대 규정은 근대 역사학 도입 이래 처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한국사 연구의 전개과정, 한국의 정치적·사회적 변화에 따른 구성물이다. 서양 역사학의 modern age는 19세기 일본에서 근세(近世)로 번역되어 한국에 소개되었고, 한국사에서 근세는 대체로 조선시대와 등치되었다가 1950-60년대 이후 근세와 근대가 별개의 시대로 분리되며 근세=early modern age, 근대=modern age로 위치 지어졌다.<sup>6)</sup> 이 글은 해방 이후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학생 및 일반인들에게 널리 읽힌 대표적인 한국사 개설서들의 근대 규정·인식과 그것의 변화 양상을 추적함으로써 한국사의 한 시대로서 ‘근대’가 구성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개설서들의 근대 규정 및 시대구분 방식의 변화는 크게 세 번의 획기를 거친다. 첫째는 ‘해방 8년사’로 지칭하는 1945년부터 1950년대 초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주로 식민지기에 교육을 받고 연구 활동을 했던 ‘실증주의 학파’ 및 ‘신민족주의 학파’ 연구자들이 해방이라는 변화에 맞추어 그간 내놓은 연구 성과들을 정리해 다수의 개설서를 내놓았다. 이 중에 진단학회의 『국사교본』(1946), 손진태의 『국사대요』(1949), 이병도의 『국사대관』(1952)을 살펴본다. 둘째 시기는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학계의 중진으로 자리 잡은

6) 이와 관련해서는 일본에서 번역어로서 ‘근대’가 만들어지고 확산되는 과정을 탐구한 야나부 아키라의 논의에 주목해볼만 하다. 야나부 아키라는 19세기 이래 일본에서 시대구분 용어로서 modern은 ‘근세’로 번역되고 사용되었으나 1950년대 이후 ‘근대’가 점차 ‘근세’를 대신해 시대구분의 정식 용어로서 지위를 차지했고, modern age에 대응하는 번역어의 지위를 독점하게 되었으며, ‘근세’는 중세의 일부 또는 중세와 근대 사이를 지칭하는 용어로서만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야나부 아키라(2011), 김옥희 역, 『번역어의 성립』, 마음산책, pp. 67-68.

기존 학자들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대학에서 역사 교육을 받은 신진 학자들의 개설서가 등장했다. 이 중에서 한우근·김철준의 『국사개론』(1954), 신석호·이홍직·조좌호·한우근의 『국사신강』(1958), 이기백의 『국사신문』(1961)을 검토한다. 셋째 시기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미국발(發) 근대화론(modernization theory)이 한국 사회에 크게 유행하고 ‘내재적발전론’에 입각한 연구 성과가 반영되면서 개설서의 근대 이해가 다시금 변화를 겪었다. 여기에서는 이기백의 『한국사신문』(1967), 한우근의 『한국통사』(1969)를 분석한다.

## 2. 근대의 부재(해방 직후-1950년대 초반)

1945년 8월의 해방은 새로운 한국사 개설서의 등장을 요구했다.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은 자주적 민족국가의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던져 주었고, 이에 따라 식민지 시대를 포함해 한국인들이 지금까지 밟아온 역사적 경험들을 정리한 새로운 민족사(national history)의 정립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역사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 각계각층의 지식인들이 당시까지의 연구 성과들을 종합하거나 해방이라는 정세에 맞추어 기존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다양한 개설서를 내놓았다.<sup>7)</sup>

이 중 『국사교본』은 광복 후 한국인이 저술한 최초의 국사 교과서다.

7) 본 논문에서 분석하는 책들 외에 이 시기의 주요 한국사 개설서들은 다음과 같다. 최남선의 『신관 조선역사』(1945)는 1943년에 내놓았던 『고사통』을 개정하여 내놓은 것이다. 문석준은 맑스주의 사관에 입각하여 『조선역사』(1945)를 내놓았는데 이는 이 시기 북한에서 간행된 유일한 통사 서술이라고 한다. 이병도는 『국사대관』의 전신인 『조선사대관』(1948)을, 김성철은 당시로서는 독특하게 한글을 전용한 『조선역사』(1946)를 내놓았다. 해방 직후 개설서들의 내용 분석은 조동걸(1993), 「현대 한국사학의 발전과 과제」, 『한국사론』 27 참조.

38선 이남 지역의 교육 행정을 담당한 미군정청 문교부는 해방 직후 체계적인 국사 교육이 전무한 실정에서 새로운 역사 교과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진단학회에 편찬을 의뢰했다.<sup>8)</sup> 이에 따라 진단학회의 김상기와 이병도가 전체 분량을 반분하여 내용을 저술했다. 저자들은 이 책을 “중등 내지 전문 정도”의 학교에서 쓰기 위해 저술했지만 “초등학교 교원의 참고용”으로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sup>9)</sup> 학생들의 학습용 교재로서만이 아니라 교사들의 교수용으로도 쓸 수 있는 범용(汎用)의 개설서를 의도했음을 알 수 있다.

『국사교본』은 4단계의 시대구분법을 취했다.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를 상고(上古), 통일신라부터 고려시대까지를 중고(中古), 조선시대를 근세(近世), 그리고 식민지시대부터 해방까지를 최근(最近)으로 규정했다. 상고, 중고, 근세를 기본 축으로 하고 근세 뒤에 ‘최근’ 또는 ‘최근세’를 설정하는 시대구분방식은 한국인 학자 중에는 현재가 1906년 『동국사략』에서 처음 채택한 이래 1920년대 황의돈이 『신편조선역사』에서, 1930년대 최남선이 『조선역사』 등에서도 사용했다. 이러한 시대구분 방식은 20세기 초 이래 일본에서 서양식 3시대 구분법을 수용하여 에도(江戸) 막부 시대를 근세사로, 메이지(明治) 유신 이후를 ‘최근세’로 지칭하는 시대구분법을 채용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sup>10)</sup>

『국사교본』의 저자들은 이러한 시대구분의 이유를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 않고, 각각의 시대들이 그 전후의 다른 시대들과 비교할 때 갖는 구조적인 특징들 또한 서술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국사교본』의 시대구분은 각 시대가 역사적 획기로서 갖는 특정한 성격을 검토한데서 나온 것이라기보다 시간의 원근(遠近)에 따른 편의적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8)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교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75688](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75688) 참조.

9) 진단학회(1946), 『국사교본』, 서울: 군정청 문교부, p. 1.

10) 야나부 아키라(2011), p. 66.

『국사교본』은 19세기 말과 그 이후의 식민지 시대, 저술 당시의 당대 사라고 할 수 있는 8.15해방까지 포괄했다. 오늘날 역사학에서 일반적으로 근대의 기점으로 파악하는 조선 후기·개항기의 역사는 조선시대 전체를 의미하는 ‘근세’의 일부로 서술되었다. 『국사교본』은 조선 왕조가 유교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서세동점’의 정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그 결과 일본의 식민지가 됨으로써 ‘근세’가 종료되고 ‘최근’의 역사로 돌입했다고 보았다. 저자들은 ‘근세의 중기’인 선조-경종 시기 조선이 “외래문물의 자극을 받은 후 비로소 자아에 눈을 뜨게 되어” “우리의 과거가 너무도 허무하고 결함이 많았다는 것을 깨닫고” “실제에 이로운 산 학문 즉 이용후생의 학문을 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어 “학풍의 일변을 보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조선 후기 실학의 형성을 언급했지만 이것을 어떤 시대 변화의 징후와 연결시키기 보다는 하나의 단편적인 사건으로 처리했다.<sup>11)</sup>

『국사교본』의 저자들은 개항 이후의 역사가 개화파와 수구파가 상호 정쟁을 거듭하면서 외국 세력을 끌어들이고 그 결과 국가의 멸망을 초래한 과정이었다고 보았다. 개항 이후 서양 문물·제도의 도입, 갑신정변, 갑오경장 등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갖는 권력투쟁의 속성을 부각시켜 서술했다. 다음의 서술은 19세기 말 이후 한국사를 바라보는 저자들의 기본 인식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국내 일부 사회에 개화 운동이 일어나 신문화, 신제도, 신조직을 급선무로 하는 신진개혁파와 이와 반대되는 수구파의 사이에 또 투쟁과 반목이 생겼다. 그들은 각기 정적을 쓰러뜨리기 위하여 외국의 세력을 이용하다가 도리어 외국세력의 침입을 유지하여 반도를 여러 외국 세력의 절충지로 변화하게 하였다. 청나라와 일본이 여기에서 충돌하고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 결국 일본의 승리로 조선은 그 칼도마 위에 올라앉아 마침내 그의 요리가 되고 말았다.<sup>12)</sup>

11) 진단학회(1946) p. 127.

신민족주의사학을 제창한 손진태의 『국사대요』는 상고사-고대사-중고사-근세사 및 현대사라는 틀과 씨족사회-부족국가-귀족국가로 이어지는 정치체의 변화를 결합한 시대구분법을 사용했다. 즉 고조선부터 부여·고구려 성립까지를 “씨족사회 및 부족국가 시대”로 규정하고 이를 상고사라 했으며, 삼국 및 통일신라를 고대사로, 고려시대를 중고사로, 조선시대를 근세사, 조선 멸망 이후를 현대사로 칭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는 고대-중고-근세로 변화하지만 이 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귀족국가라는 정치체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였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긴 시간을 모두 귀족국가시대로 규정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손진태는 왕조교체와 시대변화에 따른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강조하기보다는 삼국 이후 귀족정치체제의 장기지속성과 흥망의 반복 양상을 부각시켰다. 손진태는 『국사대요』에서 삼국부터 조선에 이르는 모든 귀족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시간이 지나며 귀족들의 “사치와 폭약”이 가중되는 가운데 “귀족정치의 말기적인 본성”을 보였고, 이에 대한 반발로 발생한 피치자들의 계급투쟁이 어우러지면서 국망(國亡)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밟았다고 보았다.<sup>13)</sup> 『국사대요』는 한국이 이러한 귀족정치의 모순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후진성에 빠졌으며 식민지배는 그로 인한 결과였다는 인식을 보인다.

삼국시대로부터 이조 말까지 약 2천년간의 정치가 민주주의적이 아니요 귀족지배의 정치며, 특권계급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정치이었던 것은 여러 번 말하였다. 이조시대의 정치는 왕실중심의 귀족정치이면서 그것이 518년을 통하여 유학의 사상으로 지배되었다는 데 특색이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유교정치는 ... 사람의 생활을 부자유하게 하고, 민족으로 하여금 활발한 기운을 잃게 하였다 ... 학교는

12) 진단학회(1946), p. 130.

13) 손진태(1949), 『국사대요』, 서울: 을유문화사, pp. 36-40.



서울에 성균관이란 것이 하나 있어 이것이 대학이요, 동부, 남부, 서부, 중부에서 학당을 두고, 지방에는 향교란 것이 있어 거기서 양반의 자손들에게만 유학을 교육하였다. 신라나 고려시대보다는 학교 수가 증가하고, 따라서 교육을 받는 사람의 수도 증가하였으나 오십보 백보의 차가 있을 뿐이요, 그 본질은 귀족독점적이었다.<sup>14)</sup>

손진태는 귀족정치는 필연적으로 부패의 길을 밟게 되어 있으므로 다수 민중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정치를 확립해야 특권계급의 부패 및 지나친 계급투쟁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귀족정치체제의 장기적 모순을 강조하는 『국사대요』의 서술은 다수 민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체제의 수립을 촉구하는 교훈적 어조를 띠었다. 그와 동시에 위에서 인용한 부분과 같이 “귀족독점적”인 체제가 삼국 이래 조선 멸망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는 서술에서는 정체론적 인식이 보이기도 한다.

『국사대요』는 이러한 인식 하에 『국사교본』과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 및 19세기 말 이후의 역사를 ‘근세’ 조선의 정치적 폐단의 연속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했다. 17세기 이래의 실학운동이 후일 일보 전진하여 “서양을 배워 조선을 다시 살리자”는 운동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면서도 그에 대해 “당시의 정치가나 학자들이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봄으로써 그 제한성을 강조했다.<sup>15)</sup> 갑신정변은 “조선을 완전한 독립국가로 만들어 서양과 같은 신문명을 건설하고자 하는 노력”이었지만 동시에 “친일파의 씨가 뿌려진” 계기가 되었다고 보았으며, 갑오개혁은 서술에서 제외했다.<sup>16)</sup> 이렇듯 『국사대요』는 시대변화·왕조교체에 따른 발전이라는 맥락보다는 귀족정치체제의 폐단 및 그 극복의 실패라는 측면에

14) 손진태(1949), pp. 250-251.

15) 손진태(1949), p. 253.

16) 손진태(1949), pp. 233-234.

초점을 맞추었다. 『국사대요』의 이러한 서술은 한국사의 전반적인 정체성을 기본 전제로 설정하는 가운데 귀족정치를 넘어선 민주정치의 수립이라는 실천적 과제를 제시했다. 삼국시대-조선시대를 지나며 고대-중고-근세로 시대가 변화했지만 귀족국가로서의 성격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본 점에서 『국사대요』의 상고-고대-중고-근세의 틀도 『국사교본』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원근에 의거했음을 알 수 있다.

이병도의 『국사대관』에 보이는 역사의식도 『국사교본』 및 『국사대요』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국사대관』은 출판 1년만인 1953년에 벌써 7판을 찍고, 1958년에는 대만에서 중국어 번역판이 출판되는 등의 성과를 거둔 1950년대의 대표적 한국사 개설서다.<sup>17)</sup>

『국사교본』과 『국사대요』가 시대구분의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것과 달리, 이병도는 『국사대관』의 서두에서 시대구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간략하게나마 밝힌다. 이병도는 “역사란 흐르고 흐르는 부단한 연속상에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절연한 시대구분을 정한다는 것은 자못 부자연스럽다”며 시대구분 자체에 대한 회의적 인식을 드러냈다.<sup>18)</sup> 그러면서도 “흐르는 물에도 구비가 있듯이” 역사에도 구비가 있으므로 자신은 “정치적 변동”에 따라 국사의 시기를 구분했다고 밝혔다.<sup>19)</sup> 이에 따라 『국사대관』은 고조선부터 통일신라까지를 상대사, 고려시대를 중세사로, 조선시대를 근세사로, 그리고 식민지시대와 대한민국 수립까지를 ‘최근’으로 규정했다. 각 시대의 성격과 특징, 시대 교체가 갖는 의미를 고려하기보다 『국사교본』이나 『국사대요』와 마찬가지로 시간의 원근에 따른 편의적 구분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국사대관』은 『국사교본』 및 『국사대요』보다 강한 정체론적 어조를

17) 「수정 증보 칠판 국사대관」, 『동아일보』 1953년 1월 8일자; 「자유중국에서 간행 이병도박사의 저서 국사대관」, 『경향신문』 1958년 5월 17일자.

18) 이병도(1952), 『국사대관』, 서울: 백영사, p. 28.

19) 이병도(1952), p. 28.

핀다. 이병도는 한국이 “지리적 조건의 적의성”에 따라 일찍부터 농업에 정착해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으므로 “평화를 사랑하는” 성향이 있는 반면 “적극적 진취적 활동”보다도 “보수적 정체적인 생활”이 더 많았다고 보았다.<sup>20)</sup> 특히 조선시대의 유교는 “너무도 명분적인, 봉건적인, 사대적인, 허례허식적인” 것으로서 “원래 정체적이고 인습적인 반도 국민”의 성격을 더 강화시켰다고 주장했다.<sup>21)</sup> 조선의 유교는 같은 유교 중에서도 “공리공감적인 정주학”으로서 지식인들의 사상을 규격화했으며, 여기에서 어떤 “비약”을 보지 못함으로써 조선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발달을 방해받았다고 보았다.<sup>22)</sup>

이러한 기본 인식 하에서 18세기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시대는 근세의 마지막 시기인 ‘근세의 후기’로 구획되었고, 전반적으로 변화와 개혁의 전망이 부재한 시대로 그려졌다.<sup>23)</sup> 탕평책이 등장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고, 19세기부터 시작된 세도정치로 사회 모순이 극에 달해 민란이 발생했으며, 이 상황에서 조선을 강타한 서세동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개화파와 수구파가 정쟁을 벌인 결과 국가가 멸망했다는 것이다. 실학사상의 발흥으로 식산흥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실질적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그려지며, 개항 이후 “현대문명의 모방과 시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서양식 제도들이 일부 수용되었음을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성과는 언급하지 않았다.<sup>24)</sup> 갑오개혁의 경우 “재래의 뿌리깊이 내려온 봉건 사회의 조직과 제도가 붕괴되고 그 대신 어느 정도의

20) 이병도(1952), p. 5.

21) 이병도(1952), pp. 291-292.

22) 이병도(1952), p. 292.

23) 『국사대관』은 『국사교본』과 마찬가지로 조선 태조~명종까지를 근세의 전기, 선조~경종까지를 근세의 중기, 영조~순종까지를 근세의 후기로 구분했다. 전기는 왕조의 체제 형성기, 중기는 당쟁과 외침의 시기, 그리고 쇠퇴와 멸망의 시기로서 후기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24) 이병도(1952), pp. 459-460.

현대국가의 체제를 모방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의의를 인정하기도 했다.<sup>25)</sup>

이와 같이 해방부터 1950년대 초반 시기를 대표하는 개설서인 『국사교본』, 『국사대요』, 『국사대관』은 시간의 원근에 따른 시대구분을 채택했다. 이 시기의 개설서들이 전반적으로 조선시대 및 개항기 이후의 역사에 대해 정체론에 입각한 해석을 했음도 확인된다. 이는 개설서의 저자들이 학습하고 성장한 식민지기 한국사 학술장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sup>26)</sup> 한국의 역사 발전이 지연된 계기를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춘 이 시기의 개설서들에서 ‘질적 변화와 발전’으로서 ‘근대’ 개념은 대체로 부재했다.

### 3. 근대 모색의 시작(1950년대 중반-1960년대 초반)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중반부터 해방 직후의 개설서들과 역사의식·서술 체계를 달리하는 새로운 개설서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해방 직후의 개설서 출판이 국사 교육의 공백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주로 근거한 것이었다면, 이 시기의 개설서 출판은 고등고시에 응시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수험용 국사 저술이 활발해진 것, 한국사 연구의 질적·양적 성장으로 새로운 통사가 요구된 것과 관련이 있다.<sup>27)</sup> 한우근, 김철준, 이기백 등 해방 공간의 대학에서 역사 교육을 받은 소장 연구자들이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개설서 서술에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sup>28)</sup> 해방 이후 연구자로서의 삶을 시작한

25) 이병도(1952), p. 467.

26) 이병도는 1910년대 말, 손진태는 1920년대 초, 김상기는 1920년대 후반으로 각각 시기는 다르지만 모두 일본 와세다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공부했다.

27) 조동걸(1993), p. 22.

이들은 이병도 등 앞 세대 연구자들의 지도를 받으면서도 그들과는 차별되는 시각에서 한국사에 접근했다.

1950년대 개설서의 새로운 경향을 선도적으로 보여준 책은 한우근·김철준의 『국사개론』이다. 한우근이 서론 및 조선시대부터 해방에 이르는 시기를, 김철준이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를 저술했다. 저자들은 서론에서 한국사의 전체 시대를 원시 씨족사회 및 부족연맹의 성장-고대 국가시대-집권적 봉건국가-한국의 근대화시대로 구분했다. 삼국시대 이전 시대는 “씨족사회 및 부족연맹 시대”로,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시대는 “고대국가시대”로, 고려와 조선을 “집권적 봉건국가시대”로, 그리고 갑오개혁부터 해방까지를 “근대화시대”로 배치했다.

『국사개론』도 앞선 시기 개설서들과 마찬가지로 정체론에 입각한 분석을 견지했다. 저자들은 한국의 “자급자족적인 소규모 농경사회는 필연 고립봉쇄적이고 보수소극적인 생활”을 자아내어 “진취 발전적인 계기”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보았다.<sup>29)</sup> 여기에는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와 유교적 봉건사상”이 어우러졌고, “관료집권적인 통제로 인한 상공업의 부진”이 더해졌으며, 이러한 역사적 구조가 “상업자본 화폐경제의 발달을 저해하고 한국의 근대화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sup>30)</sup>

그러면서도 한우근·김철준은 이러한 역사적 구조가 극복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다고 봄으로써 앞 세대의 개설서들과는 입장을 달리했다. 이들은 한국사의 이 같은 성격이 “선천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진전에 따라서 형성되고 또 변혁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sup>31)</sup> 이들

28) 한우근은 1941년 일본 도쿄제국대학 서양사학과에 입학했으나 학도강제징용에 끌려가면서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1946년 2월 경성대학 문학부 사학과에 편입, 1947년 교명이 바뀐 서울대 문리대 사학과를 졸업했다. 이기백과 김철준은 각각 1947년과 1948년에 같은 과를 졸업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encykorea.aks.ac.kr/>) 참조.

29) 한우근·김철준(1954), 『국사개론』, 서울: 명학사, p. 10.

30) 한우근·김철준(1954), p. 10.

은 “사회의 변천은 과거에서 현재로 부단히 연속되어 오는 것”이지만 “시대에 따라서 그 사회적인 구조는 달라지며” 따라서 “역사의 변천을 사회구조의 발전단계로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다.<sup>32)</sup>

이러한 기본 인식 하에 『국사개론』은 해방 이후 개설서로서는 처음으로 ‘근대로의 발전’이라는 관념을 적용했다. 저자들은 16세기 이래 “신항로의 발견과 지리 탐험에 따른 서구인들의 동양 진출”이 “동양근대화”의 단초를 지었지만 조선은 일본·중국과 달리 이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보았다.<sup>33)</sup> 조선은 서세동점의 정세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지만 “대원군의 강력한 전제정치”에는 아무런 “근대화의 맹아”가 들어있지 않았고 집권적 봉건체제를 재확립하는 방향으로 퇴행하고 말았다고 보았다.<sup>34)</sup> 이는 『국사대요』, 『국사대관』이 대원군 정치의 “개혁성”과 “과단성”을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과 구분된다. 근대화=서양화를 미완의 역사적 목표로 설정한 저자들의 역사인식에서는 대원군의 쇄국정책이 반동적인 것으로 규정된 것이다. 갑신정변에 대해서 『국사대요』와 『국사대관』이 일본에의 의존성을 들어 부정적 시각을 견지한 것과 달리 『국사개론』은 갑신정변을 “유교 관료적인 집권봉건체제를 개혁하여 근대적인 정치의 혁신을 지향한 자기노력”으로 규정했다.<sup>35)</sup> 근대로의 발전을 한국사의 목표로 설정한 저자들의 의식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국사개론』이 근대로의 전환점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평가한 것은 갑오개혁이다. 총 6편으로 구성된 『국사개론』의 제6편의 제목이 “근대국가로의 전환-근대국가로의 기형적 발전”이며 여기서 갑오개혁부터 해방

31) 한우근·김철준(1954), pp. 11-12.

32) 한우근·김철준(1954), pp. 11-12.

33) 한우근·김철준(1954), p. 352.

34) 한우근·김철준(1954), pp. 386-397.

35) 한우근·김철준(1954), pp. 431-433.

까지의 역사를 다룬다. 저자들은 갑오개혁이 일본에 의해 타율적으로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를 통해 조선 왕조가 봉건적 지배체제를 극복하고 근대적 체제로 혁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았다.

일본은 ... 조선의 통치체제를 근대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 같은 일본세력의 압력하에 이루어진 정치의 혁신이 이른바 갑오경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오경장은 이씨왕조가 봉건적인 지배체제에서 근대적인 체제로 혁신된 하나의 획기적인 사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서 조선의 근대화는 그 발단에 있어서 외국의 세력부식의 대상으로서 기형적인 성격을 띠우게 된 것이다. ... 1894년에서 1910년까지의 15,6년간은 이같이 일본이 청·로의 세력을 배제하고 조선에 있어서의 독점적인 이권을 박탈하여간 시기였고, 조선은 그 근대화의 단초에 있어서 순조로운 자기성장을 기할 수가 없이 일체 침략의 대상이 되어졌던 것이다.<sup>36)</sup>

『국사개론』은 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갑오개혁 이후로 한국에 본격적으로 근대 사회가 도래한 것으로 보았다. 다만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시작된 한국의 근대 사회는 일본의 무력을 앞세운 침략 및 식민지화를 동반한 것으로 “기형적” 형태를 띠었다고 분석했다. 즉 갑오개혁으로부터 한국은 근대에 진입했지만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통해 “종래 봉건적인 측면을 존속시키고 민족자본의 성장을 조해하여 기형적인 근대사회”를 만듦으로써 한국이 “파행적인 사회 발전”을 경험했다고 서술했다.<sup>37)</sup> 한국사의 정체성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근대’라는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단계를 한국사에 설정해보려는 문제의식이 “기형적 근대”, “파행적 사회발전” 등의 개념 설정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한 “근대화”라는 일종의 목표지향적 관념을 투

36) 한우근·김철준(1954), p. 445.

37) 한우근·김철준(1954), p. 484.

영한 『국사개론』의 서술은 당시로서는 새로운 것이었다. 기존 개설서들이 시대 구분에 큰 관심을 두지 않거나 한국의 역사적 구조의 장기지속적 측면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국사개론』은 세계사의 보편적 역사 발전의 과정으로서 ‘근대’의 존재를 한국사에서 나름대로 모색하고자 했다. 한반도에 존재한 국가가 집권적 봉건국가에서 근대국가로 발전했다는 서사에서는 일제시기 이래 사회경제사학의 영향이 엿보이기도 한다.<sup>38)</sup>

1958년 신석호·이홍직·조좌호·한우근이 공저한 『국사신강』도 『국사개론』과 마찬가지로 이전의 개설서들과 구분되는 역사인식을 보여준다. 『국사신강』의 저자들은 유럽의 역사는 “사회경제사적”으로 상당히 밝혀져서 “고대·중세·근세·현대” 등으로 시대구분을 하고 있지만 한국의 역사학은 “아직 사회경제사적으로 엄밀하게 그 내용과 성격을 해명하여 시대구분을 할만치 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sup>39)</sup> 그렇기 때문에 편의상 “중래의 시대구분”을 채택해 서술한다고 밝히면서 부족국가의 형성-고대국가의 형성-통일신라-고려왕조-이씨왕조-근대열강의 한국침략-민족의 수난과 해방으로 각 편을 구성했다. 고대국가-집권적봉건국가-근대국가라는 정치체의 성격 변화를 매개로 시대구분을 시도한 『국사개론』과 달리 『국사신강』은 각 왕조의 변화를 그대로 시대구분에 반영하는 보다 단순화된 방식을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원군 집정기부터 “근대열강의 한국침략”이라는 하나의 독립된 편으로 구분함으로써 같은 시기를 근세 조선왕조사의 일부로 서술한 『국사교본』, 『국사대요』, 『국사대관』의 시대구분 의식과는 차이를 보인다.

『국사신강』도 『국사개론』과 마찬가지로 정체론의 기본 전체를 공유하는 동시에 왕조변화에 따른 사회 발전의 의의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38) 『국사개론』에는 사회경제사학 계열 학자인 이복만의 『이조사회경제사』와 박극채의 저서가 참고문헌으로 이름을 올렸다.

39) 신석호·이홍직·조좌호·한우근(1958), 『국사신강』, 서울: 일조각, p. 11.



개항 이후 서구 문물의 수용 및 개혁 노력을 ‘근대화’라는 개념을 동원해 설명한다. 저자들은 한국은 오랜 시간 “귀족의 전제정치”하에 있었고 “경제적 토대는 미미하게 발달한 농업”이었으며 “중세적 봉건체제”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 “동양적 정체성”을 보였고 한국의 근대화 역시 “타방에 의해 기형아적으로 된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sup>40)</sup> 1957년 카를 비트포겔(Karl A. Wittfogel)이 내놓은 ‘동양적 전제주의’(oriental despotism) 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동양적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동원해 한국사를 설명하는 동시에 한국에 제한적 형태의 근대화 작업이 존재했다고 보았다.

근대화의 기점을 전후한 조선 후기-개항기에 대한 『국사신강』의 서술은 대체로 『국사개론』과 대동소이하다. 『국사신강』의 영·정조시대-대원군 집정기 이전까지의 서술은 『국사개론』의 해당 내용을 그대로 전재했음도 확인된다.<sup>41)</sup> 대원군 집정기에 대해서는 “봉건사회의 제모순을 지양하는 것이 아니라 강압과 통제으로써 왕권을 재확립”하려 했던 시대로 규정했다. 갑신정변은 “근대적 정치체제”수립의 노력으로, 갑오개혁은 “기형적인 성과”밖에 얻을 수 없는 것이었지만 “조선사회의 근대화의 발단”이었다고 보았다.<sup>42)</sup> 해당 부분을 직접 저술하지는 않았지만 『국사개론』의 저자였던 한우근이 『국사신강』의 집필에 참여했다는 점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여겨진다.<sup>43)</sup>

1961년 이기백이 내놓은 『국사신론』의 시대구분은 『국사신강』과 유

40) 신석호·이흥직·조좌호·한우근(1958), p. 8.

41) 『국사신강』 제6편의 11장 “학문적인 반성과 문운의 융흥”, 12장 “천주교의 전파와 그 금압”, 13장 “세도정치와 민중의 동요”는 『국사개론』 제5편 3장 3절 “학문적인 반성과 문운의 융흥”, 4절 “천주교의 전파와 그 금압”, 5절 “말기적인 사회피폐와 반란 동요”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

42) 신석호·이흥직·조좌호·한우근(1958), pp. 318-375.

43) 『국사신강』에서 한우근은 고려시대 부분을 저술했고, 신석호가 태조~철종까지의 조선시대 부분을, 조좌호가 대원군 집정기부터 식민지기를 저술했다.

사하다. 이기백은 부족연맹의 형성(고조선-삼한)-고대국가의 형성(삼국 시대)-고대통일국가(통일신라)-고려왕조-조선왕조-열강의 침략과 근대화-현대 순으로 시대구분을 시도했다. 『국사신론』은 서론에서 지금까지의 한국사 연구의 문제적 경향으로 “반도적 성격론”, “사대주의론”, “당파성의 문제”, “정체성의 이론” 등을 들면서 그에 대한 비판을 시도한 점에서 주목된다.<sup>44)</sup> 이기백의 이 문제제기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식민사관에 대한 체계적인 비판으로 평가받는다.<sup>45)</sup>

이기백은 왕조변화에 따른 시대구분을 채택했지만 『국사신강』과 마찬가지로 대원군 집정 이후를 별개의 편에 서술했다. 이 시기를 태조-철종까지의 조선시대와는 성격이 다른 시대로 구획하겠다는 의도를 볼 수 있다. 갑오개혁은 비록 일본의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한국 근대화의 출발점을 이루는 정치·경제·사회적인 대개혁”으로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sup>46)</sup> 특히 『국사개론』이나 『국사신강』과는 달리 『국사신론』은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발생 문제에도 관심을 두었다. 이기백은 독립협회가 “일반 국민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를 주장하여 민권운동을 일으켰”으며 이것은 한국사에서 “민주주의 건설을 위한 최초의 노력”이었다고 평가했다.<sup>47)</sup> 또한 독립협회가 발간한 『독립신문』이 “자주독립과 민권의 신장”을 위해 “국민의 대변자” 구실을 했고 국민들의 정치적 의식을 제고시키는데 제고했다고 보았다.<sup>48)</sup> 이러한 서술은 이기백이 민주주의의 발전, 민권의 신장 등을 근대의 또 다른 중요 지표로 규정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국사신론』이 출판된 시점이 4.19 직후라는

44) 이기백(1961), 『국사신론』, 서울: 태성사, pp. 1-10.

45) 김인걸(1997), 「1960, 70년대 ‘내재적 발전론’과 한국사학」, 『한국사 인식과 역사이론』, 지식산업사, pp. 113-151.

46) 이기백(1961), p. 313.

47) 이기백(1961), p. 329.

48) 이기백(1961), pp. 331-332.

점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국사신문』은 서론에서 지금까지의 한국사 서술이 “정체성의 이론”에 입각했다고 비판했지만, 그 구체적 서술에서는 정체론적 입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기도 했다. 이기백은 개항 직전까지 누적된 정치적, 사회적 모순으로 인해 조선에는 “근대화할 계기”가 막혀 있었고, 조선 왕조에서 정치적인 개혁이 행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과거의 정치체제를 반복하는 수준의 것 밖에 될 수 없었다고 보았다.<sup>49)</sup> 『국사신문』은 한국사 서술에서의 정체론을 ‘문제화’하면서도 실제 내용에서는 그것의 논리를 부분적으로 긍정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1950년대 개설서들이 해방 직후의 개설서들과 차별되는 서술을 보여준 배경으로는 먼저 이 시기부터 지식인들 사이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근대화론’의 존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950년대부터 미국으로부터 한국에 유입되기 시작한 근대화론은 2차대전 이후 등장한 아시아·아프리카의 신생국가들이 소련이 제시하는 사회주의적 발전기획이 아닌 서구식 민주주의·자본주의 발전 노선을 채택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적 담론이다.<sup>50)</sup> 근대화론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제3세계 통치 전략으로 정치적·경제적 측면이 중요했지만 또한 제3세계 국가들의 역사와 문화 전체를 재해석하려는 인식론적 기획이기도 했다. 근대화론의 영향 하에 1950년대 한국 사회는 정부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서서히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근대화라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49) 이기백(1961), p. 279.

50) 2차대전 이후 미국 사회에서 근대화론이 주도되고 정책화되는 전반적 과정에 대해서는 Gilman, Nils. 2007. *Mandarins of the Future: Modernization Theory in Cold War America*. Baltimore;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Latham, Micheal. 2000. *Modernization as Ideology: American Social Science and “Nation Building” in the Kennedy Era*.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를 참조. 1950-60년대 한국사회가 근대화론을 수용하는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는 정일준(2005), 「한국 사회과학 패러다임의 미국화: 미국 근대화론의 한국 전파와 한국에서의 수용을 중심으로」, 『미국학논집』 37, pp. 66-92.

근대화론이 전사회적 담론으로 확산된 것은 1960년대 중반이지만, 이미 1950년대부터 지식인들은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근대화론 관련 논의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승만 정권은 1950년대 말부터 경제개발계획을 작성했고, 사회과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들은 『사상계』 등을 중심으로 근대화 문제를 논구했다. 1957년부터 각종 학술 잡지에 근대화와 관련된 글들이 양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59년 2월 『사상계』는 근대화 문제를 특집으로 편성하기도 했다.<sup>51)</sup> ‘근대화’에 대한 관심이 한국 역사에서 역사적 근대화의 기점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19세기 말 이후의 역사를 그 앞의 조선시대사와 구분하여 이해하려는 시도와 연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근대화론이 준 지적 자극이 한국사 서술에서 ‘근대’를 구획하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1950년대부터 소장 학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한국사 연구의 새로운 경향도 개설서 서술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특히 천관우와 김용섭은 각각 조선후기 실학 및 갑오개혁,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연구들을 내놓으며 학계에 새로운 문제 제기를 했다.<sup>52)</sup> 천관우는 반계 유형원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근대의 맹아로써 실학이 가질 수 있었던 가능성을 탐색했고, 갑오개혁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사에서의 근대화 기점 논의를 제기했다.<sup>53)</sup> 김용섭은 1950년대 말 내놓은 논문들을 통해 19세기 후반 연쇄적으로 발생한 민란 및 그것의 ‘발전적 소인’으로서 동

51) 황병주(2008), 「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 — 근대화 담론을 중심으로 —」, 한양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09.

52) 1950년대 한국사학계에서 천관우·김용섭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주백(2013), 「1950년대 한국사 연구의 새로운 경향과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식의 내면적 교류 — 관점과 태도로서 ‘주체적·내재적 발전’의 태동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60, pp. 219-272.

53) 천관우(1952), 「반계 유형원 연구(상): 실학발생에서 본 이조사회의 일단면」, 『역사학보』 2, pp. 9-83; 천관우(1954), 「갑오경장과 근대화」, 『사상계』 1954.12.

학농민운동이 봉건사회 해체 및 근대사회로의 발전과 갖는 연관성에 주목했다.<sup>54)</sup> 이러한 연구들은 60년대 내재적발전론의 전사(前史)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등장은 그간 주목하지 못한 조선 후기-개항기 사회의 ‘차이’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개설서의 ‘근대’ 규정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 4. 자생적 근대의 가능성 탐색(1960년대 중반-1970년대 초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조국근대화”를 핵심적인 통치담론으로 내세웠다. 박정희가 1963년 11월 학생의 날 치사에서 “낙후된 우리의 현실을 내일의 자유와 번영으로 전환시키는 거창한 조국근대화의 역사적 과업”을 언급한 이래 “조국근대화”는 제3공화국의 핵심 이념으로 자리잡았다.<sup>55)</sup> 빈곤과 사회적 후진성을 극복하고 산업화를 이룩하지는 “조국근대화” 담론은 박정희 정권이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운 동원의 논리였다. 1950년대 일부 지식인들 차원에서만 논의되던 미국의 근대화론은 “조국근대화”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학술 담론으로 박정희 정권의 선택을 받아 큰 사회적 유행을 탔다. 근대화론의 대표 이론가 중 한 사람인 로스토우(W. W. Rostow)의 경제성장단계론에 대한 한국 사회의 커다란 관심은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들 중 하나다. 근대화 담론은 195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확산되었다.<sup>56)</sup>

54) 신주백(2013), pp. 254-257.

55) 황병주(2008), p. 104.

56) 일례로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http://newslibrary.naver.com>)에서 1957년부터 1966년까지 『경향신문』과 『동아일보』에서 “근대화”라는 용어를 사용한 기사를 검색해보면 57-61년까지 총 231건이 검색되는데 반해 62-66년 기간에는 총 2042건이 검

한국사 연구자들은 근대화 담론의 확산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한국의 역사적 경험에서 근대적 요소·가치와 등치될만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자 하는 작업이 한국사학계의 중요 과제로 부상했고, 이는 60년대의 다양한 ‘근대화’ 관련 학술회의의 개최 및 활발한 시대구분 논의에서 잘 드러난다.<sup>57)</sup> 특히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경제사학회가 1967~68년에 주최한 “한국사의 시대구분문제” 심포지엄이다.<sup>58)</sup> 이 회의에서 학자들은 한국사에서 근대의 기점을 어디로 잡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구체적으로는 18세기 영·정조시대, 1860년대 대원군 집정기, 1876년의 개항, 1894년의 갑오개혁 등이 근대의 기점으로 제시되었다. 이 회의에서 근대 기점에 대한 견해의 수렴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조선 후기-19세기 말의 특정 시점을 ‘근대’라는 시대로 설정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는 없었다. 조선후기~19세기 말을 전후한 시기를 근세/조선왕조사의 일부로 포함시켜 시대를 구분했던 해방 직후의 경향이 이 시기에 이르면 일변했음을 알 수 있다.

이기백은 『국사신론』을 개정하여 1967년에 『한국사신론』을 내놓았다. 전작 『국사신론』에서 부족연맹의 형성-고대국가의 형성-고대통일국가-고려왕조-조선왕조-열강의 침략과 근대화-현대의 시대구분을 취하고 이들 각각을 1개 편(篇)으로 구성했던데 반해 『한국사신론』은 지배세력의 교체를 중심으로 전체 18장의 구성을 취했다. 즉 부족연맹의 시대-고대국가-호족의 시대-귀족정치의 융성-무인정권-사대부의 등장-양반사회의 성립 등 각 국가·왕조의 지배권을 차지한 세력들의 변화를 매개로 시대

색된다.

- 57) 1960년대 학술회의에서 이루어진 한국사와 근대화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신주백(2017), 「1960년대 ‘근대화론’의 학계 유입과 한국사 연구 — ‘근대화’를 주제로 내세운 학술기획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125, pp. 45-93; 안종철(2017), 「1960년대 한국에서의 “근대화론” 수용과 한국사 인식」, 『인문논총』 74-2, pp. 43-73 참조
- 58) 이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글들은 한국경제사학회(1970), 『한국사시대구분론』, 서울: 을유문화사로 정리·출판되었다.

를 구분했다.

『한국사신론』은 ‘근대’를 목차에서 정식의 시대구분 용어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국사신론』에서 보여준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조선후기-개항기의 역사적 경험들을 ‘근대’의 것으로 개념화했다. 특히 『한국사신론』은 『국사신론』과는 달리 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한국사 내부에 존재한 자생적 근대화의 가능성을 읽어내려 했다.

일례로 대동법에 대한 평가를 들 수 있다. 이기백은 『국사신론』에서 농민들로 하여금 공물대신 쌀을 납부하게 하는 대동법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여전히 공물을 국가에 바쳐야만 했으며, 따라서 “대동법 실시는 근본적인 세제개혁이 아니”고 “조세의 부족을 보충하려는 고식적인 미봉책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사신론』의 평가는 이와 상당히 다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대동법이 실시된 뒤에도 필요에 따라 농민들로부터 공물을 받아들이기는 하였으나, 원칙적으로 공납제도는 폐지되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었다. 우선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공인이란 어용상인을 중심으로 한 상업자본을 발전시켰고, 아울러 공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독립적인 수공업의 일조했다. 이러한 여러 현상은 사회적인 커다란 전환을 초래하게 하였다.<sup>59)</sup>

『한국사신론』은 대동법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농업과 상공업 전반을 적극적으로 평가했다. 즉 17세기 이후 이앙법이 도입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크게 향상되고 상업적 농업생산이 발달했으며, 이에 따라 부농층과 빈농층의 계급 분화가 발생했음을 언급했다. 또한 조선 후기 각지에서

59) 이기백(1967), 『한국사신론』, 서울: 일조각, p. 261.

사상(私商)들이 활발히 활동하면서 국가의 통제가 약해져 자유로운 상업이 발달하는 한편, 수공업 분야에서는 공인(貢人)들의 적극적 활동으로 자본축적이 발생했다고 보았다. 이것은 “농촌에서 자본의 축적이 불가능했고 이것이 상공업 발전의 가능성을 저지”했다고 본 『국사신문』의 분석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으로서, 조선 후기로부터 사회경제적 발전의 정황, 구체적으로는 근대적 자본주의 발생의 가능성을 읽어내려는 저자의 의도가 반영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sup>60)</sup>

한우근의 『한국통사』도 50년대 중반-60년대 초반 개설서들의 서술과 차이를 보인다. 『한국통사』는 한국사의 전체 시대를 원시사회와 부족사회-고대-중세-근세-근대-현대로 구분했다. 고대는 삼국시대, 중세는 고려시대, 근세는 태조~철종까지의 조선시대, 근대는 대원군 집정기부터 갑오개혁-아관파천까지를 근대, 독립협회·대한제국부터 4.19까지를 현대로 배치했다. 근대의 중점을 갑오개혁-아관파천으로 잡고, 현대의 기점을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성립으로 잡은 시대구분법은 다른 연구자들과는 물론 한우근의 전작인 『국사개론』과도 다른 독특한 방식이다. 『한국통사』의 이러한 시대 구분은 대원군 집정기부터 189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에 조선이 겪은 변화를 ‘근대 이행’의 경험과 등치시키고, 갑오개혁-아관파천-대한제국 수립으로 이어진 1890년대 중반의 사건들을 통해 조선의 구체제가 붕괴함으로써 ‘현대’에 돌입했다는 서사를 강조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한국통사』도 『한국사신문』과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평가한다. 한우근은 “17·8세기에 걸친 수취체제의 개편이 사회 경제면에 있어서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 했으며 “대동법 실시에 따라 시행하게 된 공납청부제와 공인의 대두는 원래의 중농역상책에도 불구하고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을 촉진”시켰다고 강조했다.<sup>61)</sup> 이

60) 이기백(1961), p. 277.

61) 한우근(1970), 『한국통사』, 서울: 을유문화사, p. 335.



리한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이 진행되는 가운데 도시나 농촌에서는 “부의 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고, 이것은 “양반층과 농민층의 분화과정을 촉진” 시킴으로써 구래의 강고한 신분체제가 스스로 붕괴할 조짐을 보였음을 강조했다.<sup>62)</sup> 평민도 “부력(富力)에 의해서 그가 구속받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기존의 양반 중심 사회체제가 점점 무너지면서 거시적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sup>63)</sup> 『국사신론』과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적 변동에서 자생적인 근대로의 이행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문제의식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우근이 공저한 『국사개론』과 『국사신강』이 비슷한 시기를 다루며 “집권적 봉건사회라는 사회 구조”의 존속으로 “상업자본 화폐경제의 발달이 저해” 됨으로써 조선인들의 “고립봉쇄적이고 보수소극적인 생활”이 계속되었다고 본 것이나, 개항 직전까지 농민들의 “아무런 희망도 없는 암담한 생활”이 계속되는 가운데 “봉건사회의 제모순”이 존속되었다고 본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한국통사』에서 강화도조약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등장하는 것도 흥미롭다. 이전까지 대부분의 개설서에서 강화도조약은 세계정세에 어두운 조선이 저지른 정책적 실책으로, 일본의 침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한국통사』는 일본의 침략적 의도를 부정하지는 않으나, 강화도조약의 체결에는 세계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조선의 능동적 판단이라는 측면이 있음을 강조했다. 즉 개항 이전 고종은 중국에 왕래하는 사신들을 통해 서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올 것을 적극적으로 명령했고, 이를 통해 당시의 조선 조정에는 “국제 정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이미 싹터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sup>64)</sup> 조선은 이러한 나름의 정세판단 하에 ‘자주적 결단’으로 강화도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62) 한우근(1970), p. 340.

63) 한우근(1970), p. 341.

64) 한우근(1970), pp. 412-413.

반면 50년대~60년대 초까지의 개설서에서 근대화의 계기로, 근대로의 전환 기점으로 평가받은 갑신정변이나 갑오개혁은 상대적으로 부정적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한우근은 1950년대 『국사개론』에서는 갑신정변을 “일부 선각자에 의한 근대 정치로의 혁신 운동”으로, 갑오개혁은 “봉건 이조가 근대 국가로 전환되는 획기적인 계기”로 평가했다.<sup>65)</sup> 그러나 『한국통사』에서 한우근은 갑신정변이 “권문세가의 자제”들이 “민중에 뿌리박힌 아무런 세력 기반 없이” 일으킨 사건이라며 명확히 한계를 규정했다.<sup>66)</sup> 갑오개혁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 연구와 준비가 갖추어지기 전에 조급히 강요된 「제도적 개편」에 불과하며 일본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깊게 결부되어 있음을 부각했다.<sup>67)</sup> 갑신정변, 갑오개혁으로 인해 “기형적” 형태로나마 한국에 근대가 도래했음을 주장한 『국사개론』의 서술과는 상당히 다르다.

『한국사신론』과 『한국통사』에서 공히 나타난 조선후기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 평가는 이른바 내재적발전론 계열의 연구 성과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내재적발전론은 넓은 의미에서는 일제 식민주의 사학의 타율성론·정체성론을 비판하면서 타율이 아닌 내적 능력, 정체가 아닌 발전을 내용으로 한국사를 재구성하려고 한 입장이며, 좁은 의미에서는 조선 후기 이래 사회경제의 내적 변화에서 자생적 근대화, 자본주의 맹아의 존재를 탐색하려는 연구 경향이다.<sup>68)</sup> 조선 후기에 생산력의 발전으로 ‘경영형 부농’이 출현했다고 본 김용섭의 연구나 18세기의 수공업·광업에서 자본주의 요소가 발생했다고 본 김영호의 연구 등이 60년대에 등장하면서 내재적발전론의 서사가 구축되기 시작했다.<sup>69)</sup> 근대로 가는 ‘자생적 힘’을 강조한 내재적발전론은 서양에 의한 외

65) 한우근·김철준(1954), pp. 431-445.

66) 한우근(1970), p. 440.

67) 한우근(1970), p. 479.

68) 이영호(2011), 「내재적 발전론 역사인식의 궤적과 전망」, 『한국사연구』 152, p. 240.

부 충격을 통해서만 ‘전통’에서 ‘근대’로의 이행이 가능하다고 보았던 미국식 근대화론에 대한 한국 학자들의 대응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도 했다.<sup>70)</sup> 이기백과 한우근이 『한국사신문』과 『한국통사』에서 전작인 『국사신문』이나 『국사개론』과는 달리 한국 역사 내부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힘이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계통의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한 당시 학계의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다.

『한국통사』에서 강화도조약, 갑신정변, 갑오개혁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평가가 등장하는 것도 학계의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 1969년 한우근·이기백·이우성·김용섭이 발표한 「중고등학교 국사교육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들은 여기에서 앞으로의 역사 교과서 서술이 “국사의 전 기간을 통하여 민족의 주체성을 살리고” “민족사의 전 과정을 내재적 발전 방향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71)</sup> 이것은 당시 연구자들이 교과서를 포함해 한국사 통사 서술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즉 내재적발전론의 대두에 따라 한국사의 주요 국면들에서 ‘민족의 주체적 결단’이라는 요소를 읽어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부각되었고, 그에 따라 강화도조약, 갑신정변, 갑오개혁 등 근대 이행과 관련된 사건들이 재평가의 대상이 된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강압에 의한 피동적 대응으로 해석된 강화도조약에서는 조선의 자주적 개항 결정이라는 측면을 발견·강조하게 된 반면, 갑신정변은 일본에 의존한 일

69) 이영호(2011), pp. 251-253.

70) 안중철은 근대화론의 한국사 인식을 잘 보여주는 텍스트로 페어뱅크(John K. Fairbank)와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의 『동양문화사』를 제시한다. 안중철은 『동양문화사』가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근대화’를 수행할 수 없고 보다 강력한 외부적 동력에 의한 혁신이 없이는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전형적인 “충격-반응” 모델에 근거했다고 보았다. 안중철(2013), 「주일대사 에드윈 라이샤워의 ‘근대화론’과 한국사 인식」, 『역사문제연구』 29, pp. 293-322.

71) 이영호(2011), p. 248.

부 엘리트층의 활동이라는 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갑오개혁은 “근대국가로의 전환의 계기”에서 일본에 의한 피동적 “제도 개편”에 머물렀던 것으로 그 역사적 위치가 조정되었다.

『한국사신문』 및 『한국통사』를 통해 1960년대 중반-1970년대 초반 한국사 개설서의 근대 규정이 또 한 차례 변화를 겪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근대화론의 사회적 영향 속에 학계에서는 시대구분논의가 활발히 벌어졌고, 이 과정 속에서 50년대 중반 경부터 모색되기 시작한 근대라는 시대구분과 근대화라는 개념이 한국사연구에 정착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사신문』과 『한국통사』는 조선 후기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에 주목함으로써 한국 사회 내부에 스스로의 힘으로 구체제를 청산하고 근대로 이행하는 힘이 자라났음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60년대 이후 내재적 발전론 계통의 연구 성과가 축적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

## 5. 결론

이 연구는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의 한국사 개설서들이 ‘근대’를 규정하고 서술한 방식 및 그 특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추적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서 한국사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근대 서술의 전반적인 틀이 어떤 과정을 통해 구성되었는지 정리해보는 한편 각 해방 직후, 50년대, 60년대 등 각 시기별로 한국사 연구에서 근대를 사유하는 방식, 근대의 지표로 지목되는 사건과 구조 등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규명하고자 했다.

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의 개설서에는 ‘근대’가 부재했다. 이 시기의 개설서들은 주로 시간의 원근에 따른 시대구분법을 적용했고, 시대 변화에 따른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지리적·환경적 조건의 제약, 그리고 유교를 핵심으로 하는 봉건체제의 존속

으로 한국 역사가 발전의 계기를 찾기 어려웠다는 정체론적 서사가 보편적이었다.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 신진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내놓은 개설서들은 해방 직후의 개설서와는 차이를 보였다. 개설서에서 처음으로 ‘근대’ 및 ‘근대화’라는 개념을 동원해 조선 후기 및 개항기에 새로운 시대성을 부여하면서 ‘변화’와 ‘발전’이라는 맥락을 강조했다. 갑오개혁, 갑신정변 등을 근대로의 전환 시점으로 주목했으며, 민주주의와 민권의 발달 같은 요소들을 근대의 표지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 시기의 개설서들은 한국사의 전반적 정체성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기형적’ 발전의 시기로서 한국 근대의 상을 구축해보려 했다.

1950년대 지식인들 사이의 담론이던 ‘근대화론’은 5.16으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캐치프레이즈로 부상했다. ‘근대화론’의 사회적인 유행은 역사학자들로 하여금 한국사의 어떤 시점이 근대의 기점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다양한 근대 기점론의 제출로 이어졌으며, 50년대에 모색의 차원에서 제기된 ‘근대’라는 시대구분이 역사 서술에서 일반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더하여 60년대 이후 내재적발전론에 입각한 새로운 연구 성과들이 등장하면서 자주적, 주체적 근대의 가능성에 착목한 역사 서술이 확산되었다. 이 시기의 개설서들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조선 후기-개항기에 이르는 시기의 사회 경제적 역동성을 강조하는 한편, 개항·식민지화 직전의 한국 사회가 자생적 근대화를 이룩할 행야를 지니고 있었음을 시사했다. ‘자주적’ 근대라는 측면이 강조되면서 이전 개설서에서 근대로의 전환 기점으로 평가받았던 사건들에 대해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역사 서술을 통해 한국이 근대로의 전환 국면에서 단순히 수동적 피해자·관찰자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려 했다.

본 연구는 개설서를 중심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개설서 외의 논문이나

잡지의 기고 등에서 근대를 규정하고 구획한 방식, 개설서의 각 저자들의 ‘근대’이해의 차이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 개설서 뿐만 아니라 당대의 연구결과물 전반이 분석되어야 해방 이후부터 7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한국사 연구에서 ‘근대’가 어떻게 상상되었는지 보다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또한 강한 근대주의적 시각에서 한국사를 파악한 1950년대 이후 북한 역사학계의 동향도 시야에 넣어야 같은 시기 남한 개설서들의 사학사적 위치도 좀 더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자 료】

- 손진태(1949), 『국사대요』, 서울: 을유문화사.  
신석호·이흥직·조좌호·한우근(1958), 『국사신강』, 서울: 일조각.  
이기백(1967), 『한국사신론』, 서울: 일조각.  
\_\_\_\_\_(1961), 『국사신론』, 서울: 태성사.  
이병도(1952), 『국사대관』, 서울: 백영사.  
진단학회(1946), 『국사교본』, 서울: 군정청 문교부.  
한우근·김철준(1954), 『국사개론』, 서울: 명학사.  
한우근(1970), 『한국통사』, 서울: 을유문화사.

### 【논 저】

- 김용섭교수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간행위원회 편(1997), 『한국사 인식과 역사 이론』, 서울: 지식산업사.  
국사편찬위원회·국정도서편찬위원회(2011), 『고등학교 국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나인호(2011), 『개념사란 무엇인가: 역사와 언어의 새로운 만남』, 서울: 역사비평사.  
미야지마 히로시(2013), 『미야지마 히로시, 나의 한국사 공부: 한국사의 새로운 이해를 찾아서』, 서울: 너머북스.  
B. 크로체(1978), 이상신 역, 『역사의 이론과 역사』, 삼영사.  
신주백(2017), 「1960년대 ‘근대화론’의 학계 유입과 한국사 연구 — ‘근대화’를 주제로 내세운 학술기획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125.  
\_\_\_\_\_(2013), 「1950년대 한국사 연구의 새로운 경향과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식의 내면적 교류·관점과 태도로서 ‘주체적·내재적 발전’의 태동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60.  
야나부 아키라(2011), 김옥희 역 『번역어의 성립』, 마음산책.  
안종철(2013), 「주일대사 에드윈 라이샤워의 ‘근대화론’과 한국사 인식」, 『역사문제연구』 29.

- 안종철(2017), 「1960년대 한국에서의 “근대화론” 수용과 한국사 인식」, 『인문논총』 74-2.
- 이영호(2011), 「‘내재적 발전론’ 역사인식의 궤적과 전망」, 『한국사연구』 152.
- 정일준(2005), 「한국 사회과학 패러다임의 미국화: 미국 근대화론의 한국 전파와 한국에서의 수용을 중심으로」, 『미국학논집』 37-3.
- 조동걸(1993), 「현대 한국사학의 발전과 과제」, 『한국사론』 27.
- 조동걸 · 한영우 · 박찬승 외(1994),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하)』, 서울: 창비
- 한국경제사학회(1970), 『한국사시대구분론』, 서울: 을유문화사.
- 황병주(2008), 「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 — 근대화 담론을 중심으로 —」, 한양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원고 접수일: 2018년 1월 11일

심사 완료일: 2018년 2월 1일

게재 확정일: 2018년 2월 1일



ABSTRACT

---

Characterization and Periodization of the ‘Modern Age’  
of General Korean Histories from Liberation  
to the Early 1970s

Ryu, Keehyun\*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modern age (近代)’ was characterized in general Korean histories published from liberation in 1945 to the early 1970s. Generally, the Korean modern age is considered to have started in the late 19th century and ended in 1945. This kind of periodization on the Korean modern age had been construct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Korean historical scholarship and Korea’s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The ‘modern age’ was absent in general history writings appearing from liberation to the early 1950s. General histories of this time describe Korean history as being consistently ‘stagnated’. Analyzing history from the late Chosun period, new general histories published from the mid-1950s to the early 1960s applied the concepts of ‘modern age’ and ‘modernization’ for the first time. The narrative focusing on ‘stagnation’ of Korean history partially persisted, but general histories of this period tried to describe Korean history from the viewpoint of development, defining

---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some historical events including the Gapoh Reformation (甲午改革) as a starting point of the Korean modern age.

General histories published from the mid-1960s to the early 1970s stress the socioeconomic dynamics of Korean history. They emphasize that the Korean society of the late Chosun period had the potential to independently achieve modernization. This kind of argument could come out as a result of the nationwide spread of modernization theory and the introduction of the ‘internal development theory’. General histories after the mid-1960s tried to depict the 18th-19th centuries Korea in the modern transition period as an active player prepared to respond to political and social challenges, and not just a passive one.